

피서지 바가지요금 OUT! 생활물가 안정 ON!

- 행안부-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, QR코드 신고 등 바가지요금 근절 총력
- 생활물가 집중 관리로 국민 체감물가 안정 도모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·계곡 등 피서지와 지역 상권을 찾는 국민이 가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.

<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 대응 강화>

- 먼저,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‘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’으로 운영하고,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점검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.
- 주요 점검 대상은 피서지 외식·숙박 요금,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 요금 등으로, 가격 미게시,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을 집중 점검하고,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.
- 일부 지자체는 ‘QR코드 기반 바가지요금 신고시스템’을 도입하여, 피서객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, 이동형 현장대응반도 운영해 신속한 조치와 안내가 가능하도록 했다.
- 또한,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외에도 일반 민원,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제보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, 행정안전부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.
- 특히, 계곡 내 불법 평상 설치, 무허가 영업 행위 등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.

- 아울러, 지자체는 지역 상인회 등과 협력해 친절 서비스 교육,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자율적인 자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.
- 또한, 지자체 지정 해수욕장에는 피서 용품 가격을 통일하고 가격표를 게시해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지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- 행정안전부는 향후 바가지요금 근절에 성과를 거둔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물가 관리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으로 공유·확산할 계획이다.

<생활물가 관리 강화>

-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이 도는 가운데, 행정안전부는 생활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계부처·지자체와 협력하여 할인 지원, 상시 모니터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.
- 특히, 농축산물·수산물·외식비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변동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, 휴가철에 한정해 운영되던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11월 말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.
- 또한, 소상공인연합회 등 민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자율적인 가격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, 물가모니터링 요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과도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.
-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“국민이 피서지에서 가격 걱정 없이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”라며,
 “앞으로도 바가지요금이 발붙이지 못하게 철저히 대응하고, 생활물가도 현장에서 꼼꼼히 살피며,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	책임자	과 장	신지혜 (044-205-3902)
		담당자	사무관	박진숙 (044-205-3921)

